



미국 :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자문위원, 필수노동자들에게 백신을 우선접종 권고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공급량이 제한적인 탓에 누구에게 먼저 접종할지 논란이 있다. CNN 기사에 따르면,¹⁾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들은 75세 이상의 고령층과 최일선 필수노동자(frontline essential workers)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Phase 1b)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최일선의 필수노동자를 “사회기능에 필수적인 부문에서 일하며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한 노동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65~75세의 고령층 및 16~64세의 건강고위험군, 그리고 여타 필수노동자들이 후순위 접종 대상(Phase 1c)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도 함께 내렸다. 따라서 이달 초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가 헬스케어 노동자와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들을 우선 백신 접종 대상(Phase 1a)으로 권고한 데 이어 위 그룹들이 다음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노동자의 경우, Phase 1b에는 응급구조대(first responders)를 비롯해 교육, 식품/농업 부문, 제조업, 교정직, 우편, 식품품 가게 종사자 등 3천만 명의 필수노동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타 필수노동자가 포함된 Phase 1c에는 대중교통 및 물류, 식품서비스, 건설 및 주거, 금융, IT와 통신, 에너지, 언론, 법률, 공공안전, 수도 및 폐수 부문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대략 5천 7백만 명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 기사에 따르면 예방접종 자문위원들은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토로했다. 고령층의 기준이나 필수노동자 포함 조건을 명확히 하기 어렵기에 많은 건강취약계층들이 Phase 1c로 밀려났음을 인정해야 했다. 동시에, 이들은 정부가 주나 지역 차원의 백신 프로그램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CDC는 12월 22일 이 Phase 1b와 1c 대상자 선정 결과를 최종 승인했다.

1) The CNN(2020.12.20), “Who gets Covid-19 vaccine next? Older adults and ‘frontline essential workers,’ CDC advisers recommend,” Retrieved on Dec. 22, 2020, <https://www.cnn.com/2020/12/20/health/acip-cdc-covid-19-vaccine-phase-1b-allocation-bn/index.html>



미국 : 아마존 노동조합 결성, 이번엔 가능할까

그간 노조가 허용되지 않았던 아마존에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앨라배마주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달 연방노동사관계위원회(NLRB)에 소매, 도매, 백화점 노동조합(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 : RWDSU)에 의해 대표되는 교섭단체 결성을 위해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¹⁾ 특히 이들은 선거 요건에 맞출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NLRB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30%의 서명을 선거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5,7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서명 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기에 턱없이 부

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존은 그간 기업이 지역 경제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며 노조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그에 비해, 노조는 아마존이 노동자들의 권익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아마존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과 달리, 미국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그간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했다. 아마존은 적극적으로 조직화를 저지해왔다. 아마존 및 훌푸드 노동자가 약 137만 명에 이르며 미국이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고용주라는 점을 상기할 때, 앨라배마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될 경우,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1) CNBC(2020.12.18), "Amazon readies to face union vote at Alabama warehouse," Retrieved on Dec 22, 2020, <https://www.cnbc.com/2020/12/18/amazon-readies-to-face-union-vote-at-alabama-warehouse.html>

미국 : 항공업계 종사자들,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권을 얻기 위한 움직임 보여

최근 미국 식약청(FDA)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가하면서 의료계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항공업계의 17개 직업군 종사자들이 연합한 그룹이 그들 나름대로 최일선 노동자(frontline worker) 지위를 인정받아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서한을 보냈

다. 이에 따르면, 항공을 통한 원활한 화물운송을 가능하게 하면서 노동자들의 작업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항공업계 노동자들은 대중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동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 높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을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편지에 서명한 미국 최대 항공사 조종사 연

합은 별도로 국회의원들에게 조종석 승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우선권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¹⁾ 위와 같은 노력이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해당 우선순위

가 항공업계와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의 작업장 질병 관리 및 안전상의 이슈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1) Bloomberg(2020.12.10), "U.S. Airline Workers Seeking Priority for Coronavirus Vaccine," Retrieved on December 15th,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12-10/u-s-airline-pilots-seek-priority-to-receive-coronavirus-vaccine>

미국: 애플 등 미국 대기업들,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 수입 금지를 악화하도록 로비

애플 등 미국 대기업들이 최근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 금지를 악화하도록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9월 중국 신장 지역에서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이슬람 소수민족이 수용소에 갇혀 실제적으로 강제노역을 하고 있다는 논란을 근거로 들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¹⁾ 미 하원은 강제노역을 통한 상품 생산은 명백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교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얻어 406대 3으로 해당 법원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곧 상원을 통과하여 트럼프 현 대통령이나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미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관

계 및 교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품 수입 금지의 범위가 기존에 계획으로 발표하였던 목화 관련 제품과 토마토 및 관련 상품전체와는 달리 의류 완성품, 모발 관련 제품, 기술재 등으로 상당 부분 축소 및 좁혀진 바 있다. 이때 미국 대기업들이 위와 같은 수입 금지를 악화하도록 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경우 많은 부분의 기술재를 신장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의 상품 수입 금지가 발효될 경우 자재 조달 및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상품 수입 금지가 발효되는 시기를 더 늦추고 신장 지역 전체가 아닌 강제노역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도록 미국 정부에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

1) The New York Times(2020.09.14), "U.S. Restricts Chinese Apparel and Tech Products, Citing Forced



Labor,” Retrieved on December 5th, 2020, <https://www.nytimes.com/2020/09/14/business/economy/us-china-forced-labor-imports.html>

2) The New York Times(2020.11.29), “Nike and Coca-Cola Lobby Against Xinjiang Forced Labor Bill,” Retrieved on December 5th, 2020, <https://www.nytimes.com/2020/11/29/business/economy/nike-coca-cola-xinjiang-forced-labor-bill.html>

독일 :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법정 최저임금 평가 결과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2020년 12월 14일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¹⁾ 이번 평가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법정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부문에서 시간당 임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임금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소폭이지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의 시행 및 점진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과 같은 부작용이나 전반적인 경제 및 물가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방노동사회부(BMAS) 장관인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되었다며, 향후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현재 시간당 9.35유로(약 1만 2,500원)인 법정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5유로(1만 2,700원)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평가를 기초로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1월에 제안할 예정인 조정안은 차기 법정 최저임금 인상 절차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연방노동사회부(BMAS), 언론보도용 자료(2020.12.14), “Der Mindestlohn hat sich bewährt,” <https://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mindestlohn-evaluation.html>

독일 : 직업훈련생 채용 및 고용승계 보조금 연장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며, 특히 직업훈련 고용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

정하였다.¹⁾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직업훈련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신규 직업훈련생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특별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파산 절차에 돌입한 사업장에 속한 직업훈련생의 고용을 승계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2020년 4월과 12월 사이에 2개월 이상 평균 매출액의 50% 이상

이 감소하였거나, 매출액이 5개월 연속 전년 평균의 30% 이하로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이러한 직업훈련생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기한을 2021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1) 연방노동사회부(BMAS), 언론보도용 자료(2020.12.10), “Mehr Unterstützung für Ausbildungsbetriebe in der Corona-Pandemie,” <https://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mehr-unterstuetzung-fuer-ausbildungsbetriebe.html>

독일 : 2021년부터 자녀 보조금, 아동수당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어린이 지원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에 포함된 어린이 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 보조금(Kinderzuschlag)과 보편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아동수당(Kindergeld)이다.¹⁾

우선 부모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자녀 보조금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 의회를 통과한 후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재설계 및 교육 및 참여 서비스 개선을 통한 가족 및 자녀의 목표 강화에 관한 법률(Starke-Familien-Gesetz)」²⁾에 포함되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연방아동수당법(BKGG)」에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 보조금 수급자격은 동일 가구에 소속된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부모(편부모 포함)로서 법에서 정

하고 있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어진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녀 보조금의 인상액은 자녀 1명 당 월 205유로(한화 약 27만 5천 원)를 상한으로 기존 수급액에서 최대 20유로(약 2만 6천 원)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보조금 액수의 조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월 최저생계비 인상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양부모, 조부모 포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2021년 1월부터 인상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 1명 당 월 15유로(약 2만 원)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첫째·둘째 자녀는 월 219유로(약 29만 3천 원), 셋째 자녀는 225유로(약 30만 1천 원), 넷째 자녀는 월 250유로(33만 4천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 연방노동청(BA), 언론보도용 자료(2020.12.8), “Kindergeld steigt ab Januar,” <https://www.arbeitsagentur.de>



de/presse/2020-54-kindergeld-steigt-ab-januar; 연방노동청(BA), 언론보도용 자료(2020.12.17), “Kinderzuschlag steigt ab Januar,” <https://www.arbeitsagentur.de/presse/2020-55-kinderzuschlag-steigt-ab-januar>

2) BGBl. I S. 530, 532, 2019.4.29.

스웨덴 : 평등옴부즈만, H&M의 인종에 따른 고객 차별건 조사

스웨덴의 평등옴부즈만(Diskrimineringsombudsmannen)은 스웨덴의 의류기업 H&M의 한 매장에서 벌어진 고객 인종차별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¹⁾

스웨덴 일간지 아프톤블라데트(Aftonbladet)는 비밀 촬영을 통해 H&M 매장 점원의 고객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위를 포착했고 이를 기사화하였다.²⁾ 아프톤블라데트는 H&M에 방문한 이민자 배경을 가진 여성 고객이 영수증 없이 상품을 교환하고자 했을 때와 스웨덴 출신 여성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이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에 따르면 비스웨덴 출신 고객은 상품을 교환하지 못했으나 스웨덴 출신 고객은 상품 교환에 성공했다. 한편 H&M은 상품에 손상이 없고, 교환 당시 매장에 배치된 상품인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도 상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 방침을 두고 있었다.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은 이 기사가 발표된 이후,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H&M이 인종을 바탕으로 고객 대우에서 차별적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프톤블라데트는 비밀촬영 영상 외에 H&M 매장 전 현직 직원 10명과 인터뷰하여, 상품 교환 시 고객의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 대부분은 고객의 인종에 따라 상품 교환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익명의 직원은 비스웨덴 출신 고객에 대한 처우가 스웨덴 출신 고객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낮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H&M은 평등옴부즈만이 요청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12월 22일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평등옴부즈만이 이번 H&M 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요구한 자료는 비스웨덴 출신 고객이 상품 교환 및 환불 시, H&M의 회사 방침에 준하여 올바른 처우를 받고 있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기시간을 가져야 하는 지 등이다.

평등옴부즈만은 기업 및 개인의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나 의견서를 만들어 차별방지법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DO(2020.12.9), “DO inleder tillsyn av H&M,” <https://www.do.se/om-do/pressrum/aktuellt/>

aktuell-2020/do-inleder-tillsyn-av-hm/

2) Aftonbladet(2020.12.9), “Här avslöjas H&M av dolda kameran,” <https://www.aftonbladet.se/nyheter/a/Epp2lA/har-avslojas-hm-av-dolda-kameran>

스웨덴: 코로나19 현황 및 정부의 새로운 권고 사항

칼 구스타프 16세(Carl XVI Gustaf) 스웨덴 국왕은 스웨덴 텔레비전(SVT)의 한 프로그램(Året med Kungafamiljer)에서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많은 사상자를 낸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¹⁾ 국왕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스웨덴 언론 및 외신은 이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국왕의 해당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공공보건청의 감염학자인 안데르스 테그넬(Anders Tegnell)은 관련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관련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권고사항을 발표했다.²⁾ 우선 전국의 술집 및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한 권고사항에 변화가 있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전국의 모든 술집, 레스토랑은 저녁 8시 이후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기존에는 저녁 10시까지 가능), 술집 및 레스토랑 내 모임 인원의 제한을 변경하여 한 테이블당 최대 4인만 착석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기존 8인).

이밖에도 정부는 실내 쇼핑센터, 운동시설 등에 최대 수용 인원을 표기하고 초과 인원 입장 제한을 둘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은 1월 24일까지

운영을 중지한다. 교육기관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고등학교는 1월 24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매년 봄에 개최되는 전국 학력고사는 공공보건청의 권고에 따라 취소되었다.

정부의 최근 권고사항에서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 19 확산 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언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떤 형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의 가이드라인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는 1월 7일 전에 공표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운영기관에서는 승객들을 위한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재택근무 권고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집에서 일할 것을 요청하며 불필요한 출퇴근을 자제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되었던 병가제도에도 추가 변동사항이 있었다. 병가 2주째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사진단서를 병가 3주째부터 첨부하도록 한 예외 조치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재연장되었으며 병가급여의 상한선도 1일 804SEK(약 10만 6천 원)에서 810SEK(약 10만 7천 원)로 상향 조정되었다.³⁾



스웨덴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과 함께 2020년 12월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모든 국가에 백신을 똑같

이 배정 및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처음으로 공급되는 백신은 화이자의 백신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월 21일 해당 백신을 승인했다.⁴⁾

- 1) Svt(2020.12.17), "Kungen om pandemin: Jag anser att vi har misslyckats," <https://www.svt.se/nyheter/inrikes/kungen-jag-anser-att-vi-har-misslyckats>
- 2) The Local(2020.12.18), "Sweden rolls out series of new coronavirus measures, including face masks," <https://www.thelocal.se/20201218/swedish-prime-minister-stefan-lofven-press-conference-coronavirus>
- 3) The Local(2020.12.14), "Today in Sweden: A round-up of the latest news on Monday," <https://www.thelocal.se/20201214/today-in-sweden-a-round-up-of-the-latest-news-on-monday-20201214>
- 3) The Local(2020.12.21), "European Union officially approves Pfizer vaccine for rollout," <https://www.thelocal.se/20201221/eu-medical-regulator-approves-pfizer-vaccine-for-use>

영국 : 저임금 노동자의 겸업이 쉬워질 전망

2020년 12월 4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는 주당 임금 120파운드(약 18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계약에 '겸업제한 조항(exclusivity clauses)'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¹⁾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consultation)에 나섰다. 동조항이 금지될 경우 180만여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가 자유롭게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일하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동시에 고용주들은 보다 다양한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²⁾

또한, 영국 정부는 퇴직 후 경쟁사 취업 및 창업을 막는 '경쟁금지조항(non-compete clauses)'이 현재 불필요하게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고, 이의 사

용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능력 활용을 장려하고 영국 전역에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경쟁금지조항을 사용하는 고용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경쟁금지조항 사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³⁾

디지털경제연합(Coalition for a digital economy)의 도미니 할라스(Dominic Hallas) 이사는 경쟁금지조항 사용 제한에 대해 일부는 불평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영국의 기술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국노총(TUC)의 프랜시스 오그레이디(Frances O'Gardy)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은 이번 조치가 땀질 처방에 불

과하다고 비판했다.

- 1) 현재는 영시간 계약(zero hours contracts) 근로자에 대해서만 겸업제한 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 2) Financial Times(2020.12.4), "Low-paid UK workers to be given freedom to take extra jobs," <https://www.ft.com/content/c879b1b3-5924-4767-b561-b9675de79b3b>
- 3) Gov.UK(2020.12.4), "Government to consult on crackdown on unfair employment clauses in a boost for low paid workers,"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to-consult-on-crackdown-on-unfair-employment-clauses-in-a-boost-for-low-paid-workers>

영국 : 씹크탱크, 저임금 노동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강제휴직과 직업 대체 가속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

영국 씹크탱크 파비아 소사이어티(Fabian Society)와 일반노조인 커뮤니티(Community)가 설립한 노동자 및 기술 위원회(Commission on Workers and Technology, 이하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많은 기업이 생존을 위해 혁신과 새로운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그동안 강제휴직(furlough) 처리되었던 일자리 중 상당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¹⁾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 중 강제휴직 처리된 960만 개의 일자리 중 61%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속하며, 특히 310만 개의 일자리는 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동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에 속한다. 또한 소득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 노동자 중에서는 15%가 강제휴직

한 반면 소득 하위 20% 노동자 중에서는 동비율이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데믹으로 인한 강제휴직과 직업 대체 가속화라는 이중고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① 강제휴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상교육, ② 소매업, 숙박·음식업에 재교육 및 구직 지원 집중, ③ 간병인과 같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저임금 직업의 임금과 대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 의장인 노동당 의원 이베티 쿠퍼(Yvette Cooper)는 팬데믹으로 인해 자동화에 의한 직업 대체 속도가 빨라지면서 양극화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1) BBC(2020.12.15), "Low-paid workers face pandemic 'double whammy'," <https://www.bbc.com/news/business-55310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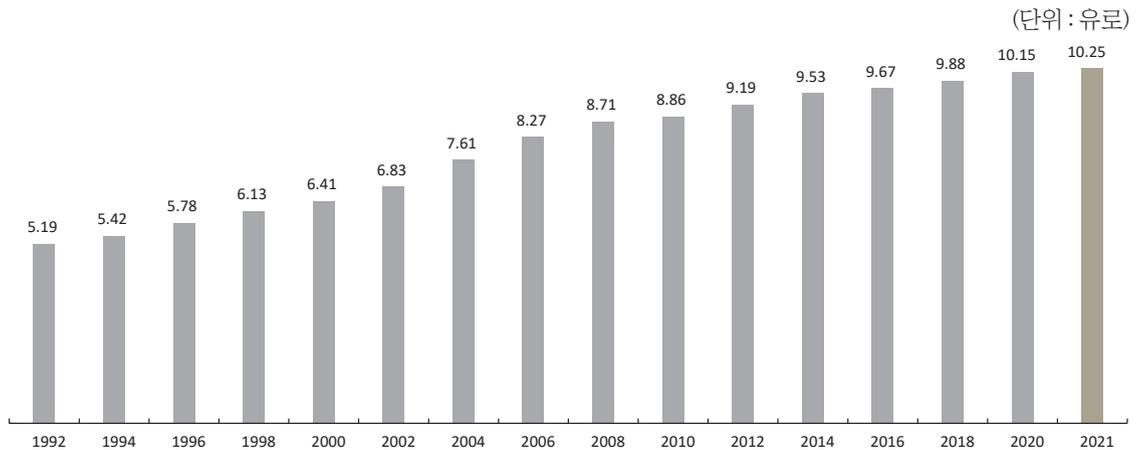
프랑스 : 2021년 최저임금 10.25유로로 소폭 인상 예정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약간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작년 인상을 1.2%보다 낮은 1% 미만으로 인상되어 시간당 10.25유로(약 1만 3,700원) 또는 월평균 1,554유로(약 208만 1,100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저임금 재평가 공식을 통해 자동 산출된 결과로 12월 15일 통계청(INSEE)에서 발표한 것이다. 공식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 위 가계의 인플레이션'과 '노동자 기본 시급의 구매력 증가'라는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이 중 첫째

요소는 음수(-0.2%)를 기록, 크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둘째 요소는 1.91% 기록하여 2021년 최저임금은 0.955% 인상될 것이다.¹⁾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민간부문의 직원 225만 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수혜자 비율은 13%로 2019년 13.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 비율은 시간제 근로자(30%, 정규직의 경우 9%)와 직원 1~9명 규모의 사업장(27.3%, 10명 이상 사업장 9.8%)에서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1992~2021)



자료 : 고용노동통계청(DARES).

1) Les Echos(2020.12.15), "Le SMIC va augmenter de 15 euros par mois au 1er janvier,"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le-smic-porte-a-1025-euros-brut-par-heure-1274092>

프랑스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1분기 49만 1,600개, 2분기 15만 8,400개의 일자리 손실: 2020년 1분기에는 49만 1,600개의 일자리가, 2분기에는 15만 8,4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후 3분기에 반등하여 40만 1,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민간부문 31만 2,400건, 공공부문 8만 8,700건) 되었다.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된 임시직의 경우 11월 말 기준 4년치에 해당되는 7만 8,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있었다. 대규모의 정부 지원이 있었음에도 '해고의 물결'이 있었고, 많은 전문가가 2021년에도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7~9월 실업자 62만 8,000명 증가: 봉쇄로 인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2분기 실업률 수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랑스 통계청(INSEE)은 3분기에 '전례 없는' 실업률 증가를 예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른 실업률은 1.9%p 증가하여 9%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7월부터 9월까지 마요트(Mayotte) 지역을 제외하고

62만 8,000명 증가하여 총 270만 명을 기록했다.

부분실업 상태인 노동자 900만 명: 10월에 발표된 추정치에 따르면 160만 명의 노동자가 부분실업 상태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봄에는 900만 명의 노동자가 부분실업 상태였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은 숙박 및 케이터링 부문(47만 명), 비즈니스 서비스 및 무역 부문(각 24만 명)으로 3월 이후 부분실업은 주 정부와 상공업 고용연맹(UNEDIC)의 총 누적 지원금은 234억 유로에 달한다고 고용노동통계청(Dares)은 추정했다.

2021년 예상 기업부도 건수 6만 2,000건: 9월 말 신용 보험 회사 외러 에르메스(Euler-Hermes)가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에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6만 2,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다.¹⁾

1) Les Echos(2020.12.9), "Covid : quatre chiffres choc sur l'emploi en France,"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budget-fiscalite/covid-quatre-chiffres-choc-sur-lemploi-en-france-1272442>

일본 : 후생노동성, 코로나19가 청년고용에 미친 영향 검토¹⁾

지난 10월 23일 후생노동성은 『미래 청년고용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현시점에서 코로나19의 감염 확

대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나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및 산업구조 등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가 청년의 고용 기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보고서』는 감염 확대 이전에 비해 기업의 정규직 채용 규모가 크게 줄었으며, 올해 3~9월 사이에 신규 채용이 내정되었다가 취소된 사람도 201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2020년 이후 신규 졸업자들이 일정 기간 미취직·미진학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자나 프리터(freeter), 니트(NEET)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고서』는 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첫째는 '신규 졸업자에 대한 정착 지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법」에 기초해 청소년

고용정보, 특히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에 관한 정보 공개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스엘 제도²⁾에 대해 인증 기업의 업종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커리어 자립을 위한 지원'이다. 이는 커리어 컨설팅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정비하여, 청년들이 입사 후 조기에 자립적인 커리어를 쌓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청년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원'으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등 모든 방안을 통해 청년고용안정화에 필요한 지원체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해 앞으로 5년간의 '청소년 고용대책 기본방침'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1) ビジネス・レーパー・トレンド(2020.12), “若手雇用/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の影響 若年者雇用を検討——厚労省研究会,” <https://www.jil.go.jp/kokunai/blt/backnumber/2020/12/046-047.pdf>
- 2) 후생노동성이 청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일본 : 유통/서비스 업계 노동자 5명 중 1명 코로나19 관련 갑질 경험¹⁾

유통과 서비스 업계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산별 노동조합인 UA전선이 작년 7~9월 2만 7천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자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 코로나19의 확대와 관련한 갑질 행위

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77명(20.3%)이었다. 행위의 형태로는 폭언(39.3%)과 반복적으로 클레임 넣기(17.1%)가 많았다. 업계별로 보면 드러그스토어(66.6%)와 슈퍼마켓(43%)의 비율이 높아,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 NHK(2020.12.3), “流通 サービス 5人に1人 コロナ影響で客から暴言など 労組調査,” <https://www3.nhk.or.jp/news/html/20201203/k10012743141000.html>

일본 : 비정규직 공무원의 60% 이상 상여금 수령 예정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등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全日本地方自治体労働組合, 이하 ‘자치로’)이 회계연도 임용직원²⁾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6월 1일 실시하였으며 자치로에 가맹된 1,323개 자치단체 중 521개 자치단체로부터 회답을 회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1개 자치단체에 소속된 회계연도 임용직원의 수는 24만 8,041명으로, 정규직을 포함한 직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9%였다. 회계연도 임용직원 중 풀타임 노동자는 1만 8,954명(7.6%), 단시간 노동자는 22만 987명(92.4%)이었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에 속하지만 거의 풀타임 노동자라 볼 수 있는 ‘주당 소정노동시간이 35시간 이상’인 노동자를 선별하면 5만 5,518명(24.2%)이었다.

임금 분포를 보면 평균 시급은 ‘800엔 이상’이 3.5%, ‘900엔 이상’이 24.9%, ‘1천 엔 이상’이

71.5%였다. 평균액은 1,085엔이었는데,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6년(988엔)과 2012년(950엔)에 비해 증가했다. 평균 월급은 ‘16만 엔 이상~18만 엔 미만’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4만 엔 이상~16만 엔 미만’이 22.3%, ‘18만 엔 이상~20만 엔 미만’이 20.2%였다.

상여금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살펴보면, 상근 직원 수준인 월급 기준 ‘2.6개월치’는 풀타임 노동자의 67.9%, 단시간 노동자의 58.5%가 받았으며, ‘1.45개월치’는 풀타임 노동자의 10.8%, 단시간 노동자의 13.4%가 받았다. 기말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은 풀타임 노동자의 1.4%, 단시간 노동자의 9.0%였다. 통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승급에 대해서도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60% 이상의 노동자가 승급했다고 회답했다.

이 결과에 대해 자치로의 오니키 마코토(鬼木誠) 서기장은 “각 지역 조직에서 수준 개선을 요구하고 교섭한 결과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 ビジネスレーバートレンド(2020年11月号), “ほぼ6割以上の自治体は常勤並みの期末手当 地方公務員 を会計年度任用職員に支給——自治労調査,” <https://www.jil.go.jp/kokunai/blt/backnumber/2020/11/056-057.pdf>

2) 회계연도 임용직원이란 2020년 4월부터 새롭게 창설된 임시·비상근 공무원직을 말한다. 회계연도 임용직원이 생기기 전에도 지자체에 비정규 공무원직원은 존재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6개월~1년이었으며, 임금이 낮고 상여에 상당하는 기말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각 지자체는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비정규 공무원직원의



수를 크게 늘렸다. 그런데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임용 취지와 맞지 않거나, 노동자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비정규 공무원들을 회계연도 임용직원(풀타임/단시간)으로 새로 구분하였고, 이들의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하기로 하였다.

중국 : 택배, 육아 등의 직종에도 직업능력평가 도입

중국에서 택배노동자, 육아노동자 등과 같은 ‘신(新) 블루칼라’ 노동자들도 의사, 엔지니어 등과 같은 노동자처럼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신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직업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숙련 노동자를 양산해 관련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 또한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신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더 큰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직업적으로 더 큰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²⁾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0년 11월 12일 “기업 숙련 노동자 평가 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지”를 발표했다.³⁾ 이 공지에서는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권한을 위임할 것과 ‘해당 고용주가 평가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각 기업이 노동

자 직업능력평가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능력등급제를 주요 방식으로 하는 노동자 직업능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각 기업이 노동자 직업능력평가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범위를 결정할 것. 둘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업능력등급을 설정할 것. 셋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범위를 개발할 것. 넷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방법을 운용할 것. 다섯째, 경쟁을 통해 직업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또한 공지는 직업능력 등급제 시스템과 전문기술 직함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에 인재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사회교육, 훈련평가 조직으로 신청할 것을 독려했다. 그리고 기업이 발급하는 직업기능등급 증명서는 각급 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증명서 조회시스템으로 통합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1) 澎湃(2020.11.14), 「“藍領”也能評職稱, 半月談 : 打破技能人才成長“天花板”」,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990625

2) 澎湃(2020.11.15), 「快遞員、育兒嫂等“新藍領”評職稱 : 對新興職業的認可和支持」,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998780

3) 中華人民共和國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2020.11.12), 「人社部印發通知支持企業大力開展技能人才評價工作」,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rsxw/202011/t20201112_396364.html

중국 : 2020년 중국 최저임금 최고 2,480위안(약 42만 원)

2020년 중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개 성(省)급 지역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¹⁾ 그 중에서도 상하이시(上海市), 베이징시(北京市), 광둥성(廣東省), 톈진시(天津市),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등 6개 성급 지역의 월 최저임금이 2,000위안(약 33만 7천 원)을 넘었다. 도시별로는 상하이시가 가장 높은 2,480위안(약 42만 원)을 기록했고, 뒤이어 베이징시 2,200위안(약 37만 4,000 원), 선전시(深圳市) 2,200위안, 광둥성 2,100위안(약 35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는 베이징시가 24위안(약 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하이시가 22위안(약 3,7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톈진시와 광둥성이 성급 지역 중 시간당 최저임금이 20위안을 넘는 지역이었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성급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책정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한 지역 내에서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6개 성급 지역에서 월 최저임금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대체로 3개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베이징시나 톈진시, 상하이시, 선전시, 시짱성(西藏省, 티벳), 칭하이성(青海省)처럼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한 등급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지역도 일부 존재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인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9.7위안(약 8,400원)에서 5만 8천 위안(약 976만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한편 2020년 11월 23일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2020년 베이징시 산업별 임금지침을 발표했다.²⁾ 관련 기업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올해 베이징시 연 최저임금은 2만 6,400위안(약 445만 원)으로 작년보다 480위안 상승했다. 참고로 2019년 연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440위안 상승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지침은 이론적인 최저선으로서, 초과근무, 고온 혹은 저온, 광산, 유독물질 관련 산업 등과 같은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수당 및 노동자 개인이 납입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베이징시정부는 식품제조업, 일반장비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건축인테리어업, 도매업, 관광 및 숙박업, 출판업 등 13개 산업의 임금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해에 발표한 19개 산업에 비해 자동차소매업, 도로화물운송업,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등 6개 산업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노동학회 쑤하이난(蘇海南) 부회장은 올해 최



저임금 기준이 다소 인상되긴 했지만, 많은 지역에서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인상폭이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 1) 騰訊網(2020.12.17), 「2020全國最新最低工資標準公布, 10省份上調, 你在其中嗎?」, <https://new.qq.com/omn/20201217/20201217A0JU3300.html>
- 2) 人民網(2020.11.24), 「26400元! 北京劃定2020年最低工資保障線」, <http://finance.people.com.cn/n1/2020/1124/c1004-31941770.html>

브라질 : 2021년 최저임금 5.2% 인상, 실질 인상률은 제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 5.26%만 반영한 1,100헤알(약 22만 8천 원)로 결정됐다. 2020년 12월 30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발표한 최저임금 최종안은 12월 16일 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추정치 1,088헤알(약 22만 6,000원)보다 12헤알(약 2,500원) 높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55헤알(약 1만 1,400원)이 올랐다. 브라질 노총(CUT)은 12월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5.22%만을 고려하다 보니 최저임금 실질 인상은 제로에 그쳤다고 비판했다.¹⁾

브라질의 최저임금 제도는 약 8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34년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을 공포한 후 4년 만에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열 개의 기본 생필품 가격을 기준 삼아 대통령이 최저임금액을 발표하였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14개 지역별로 자체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룰도 있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

는 지역 경제에 따라 2.67배 차이를 보였다. 이후 1984년이 되어서야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으며, 1988년 헌법 개정 시 제7조에 '최저임금은 주거, 식비, 교육, 건강, 여가, 의복, 위생 등 노동자와 가족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주기적인 조정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²⁾ 2000년대 이후에는 룰라 정부에 의해 전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Índice Nacional de Preços ao Consumidor: INPC)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국내총생산(GDP) 변동폭을 반영한 최저임금 설정 기준이 새롭게 수립되었으며, 2007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기준(política de valorização do salário mínimo)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시행의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덕분에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하였지만, 2016년 이후 경기 침체와 정부 정책의 소극성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1% 미만을 웃돌았다.³⁾ 브라질에서 현재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약 4,900만 명에 이른다.⁴⁾

- 1) CUT(2020.12.31), "Sem aumento real salário mínimo vai a R\$ 1.100,00, em 2021," <https://www.cut.org.br/noticias/sem-aumento-real-salario-minimo-vai-a-r-1-100-00-em-2021-3ada>
- 2) <https://www2.senado.leg.br/bdsf/bitstream/handle/id/180154/SalMinimo.pdf?sequence=1&isAllowed=y>
- 3) RedeBrasilAtual(2019.4.14), "Governo Bolsonaro acaba com política de valorização do salário mínimo," <https://www.redebrasilatual.com.br/economia/2019/04/governo-bolsonaro-acaba-com-politica-de-valorizacao-do-salario-minimo/>
- 4) G1(2020.12.15), "Salário mínimo: veja histórico dos últimos reajustes,"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12/15/salario-minimo-veja-historico-dos-ultimos-reajustes.ghtml>

브라질 : 브라질 노총,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캠페인 착수

브라질 노총(CUT)은 2020년 12월 15일 직장 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차별, 괴롭힘, 성폭력 사건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조약(Protocolo de Prevenção e Ação em Casos de Discriminação)을 채택했다. 노총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직장 내 여성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최근 파트리시아 갈방(PATRÍCIA GALVÃO) 연구소가 실시한 직장 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76%가 직장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했으며 응답자의 36%는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편견이나 학대를 겪었다고 답했다. 일에 대한 과도한 감독, 언어폭력, 퇴사 암시, 의견 묵살, 신체 속성에 대한 언급 등이 직장폭력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¹⁾ 이에 따라 브라질 노총은 전국여성위원회의 주도로 직장 내 성차별 예방 및 괴롭힘과 폭력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캠페인을 조직하고, 노총이 채택한 조약을

사업장 단위까지 확장하기 위해 단체협상 의제화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총의 이러한 활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협약(제190호)」 비준 운동과도 연계될 예정이다.²⁾ ILO 협약 제190조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제108차 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르면,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 및 괴롭힘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적, 성적 또는 경제적 피해로 귀결 또는 귀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용납할 수 없는 행동 및 관행, 또는 그 위협 전반을 말한다. 브라질 노총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상황이 가사노동 및 취약한 여성의 삶과 노동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ILO 협약 비준은 젠더 및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금지를 강제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 1) Instituto de Patrícia Galvão(2020.12.18), “PESQUISA PEVELA: 76% DAS MULHERES JÁ SOFRERAM VIOLÊNCIA E ASSÉDIO NO TRABALHO,” <https://agenciapatriciagalvao.org.br/violencia/pesquisa-revela-76-das-mulheres-ja-sofreram-violencia-e-assedio-no-trabalho/>
- 2) CUT(2020.12.16), “CUT adota instrumento para construir igualdade de gênero na Central,” <https://www.cut.org.br/noticias/cut-adota-instrumento-para-construir-igualdade-de-genero-na-central-991f>